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박원석 : 723-5056)  
 제 목 신한국당 경선의 과열·타락·혼탁상에 대한 성명  
 날 짜 1997. 7. 15. (총 2쪽)

## 보 도 자 료

### 더 두고 볼 수 없는 신한국당 경선행태, 국민이 분노한다 신한국당 경선의 과열, 타락, 혼탁상에 대한 성명

일시 : 1997. 7. 15(화)

오는 7월 21일 대통령후보 선출을 앞두고 전개되는 신한국당의 경선과정이 후보간의 과열경쟁을 넘어서 급기야 금품시비에까지 이르는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스스로 소리높여 외치던 '고비용정치구조의 청산과 정치개혁'의 구호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줄서기와 상호비방, 지역주의 조장, 독재찬양등 구시대 정치의 전형만이 난무하고 있다. 소위 7룡이라 불리는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개혁'과 '국민통합'의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치행태가 과연 '개혁'과 '통합'의 적임자로서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 줄서기 다툼속 '정치개혁'은 뒷전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하며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신한국당 경선이 시작된 이래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후보들의 정치철학이나 정책이 아니다. 이른바 김심, 정발협, 대세론, 합종연횡과 같은 말들이 경선판도를 좌우하고 있으며, 출신지역과 학맥을 이용한 배타적인 세싸움이 판을 치고 있다. 소신을 발휘할 최소한의 기준과 차별성이 없을뿐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줄서기가 야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선풍토가 다가올 대선 자체의 혼탁을 예고해주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모처럼 실시되는 집권여당의 경선에 대한 환멸이 정치적 절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태는 국회운영의 차질을 가

져오고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당장 임시국회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임시국회의 소집목적이었던 정치개혁 논의는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은 줄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를 뒷전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이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집권여당과 그 후보들이 보이고 있는 이같은 이율배반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신한국당이 끝까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정치행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 선거는 이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장이 되리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퇴행적 선거행태

그간 각 지역별로 전개된 신한국당의 대의원 유세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보인 퇴행적인 선거행태들은 신한국당 경선의 혼탁함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가 아닐수 없다. 공작정치 시대애나 있을법한 괴문서가 나도는 한편,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후보들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사회일각의 보수적인 기류에 편승해 독재자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어이없는 반역사적인 행동마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같은 퇴행적인 선거행태가 고스란히 대통령 선거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후보 가계의 사상을 문제삼은 괴문서는 매년 선거마다 제기되었던 용공시비와 다를바 없다. 또한 '영남후보론', '영남후보배제론', '강원도푸대접론'등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있는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지역대결'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소위 '박정희 신드롬'에 편승해 개발독재의 업적을 찬양하고 자신이 가장 박정희를 닮았다는 다툼은 '역사의식 부재'와 '가치빈곤' 그리고 '권위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은 영남에서 독재자를 옹호하고 내은 호남 민중의 항쟁을 찬양하는'식의 이중성 마저도 거침없이 드러내는 한국당 후보들에게 과연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수 없다.

구태여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달성한 목적이 결국 정당할 수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행이 가져온 작금의 정치적 분열과 혼탁상만으로도 신한국당과 그 후보들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없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밝혀두고자 한다.

### 겉으로는 고비용 타파, 안으로는 돈뿌리기

박찬중 후보의 이회창 후보측에 대한 공개 지목으로 신한국당 경선이 격렬한 금품수수 시비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우선 이같은 논란의 진위여부를 떠나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이 추악한 금품시비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당 초유의 자유경선'이라는 의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돈으로 당원을 매수하는 선거는 부정선거이지 자유경선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이같은 논란의 진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함을 아울러 제기하는 바이다. '대의원 1인당 100만원씩 60억이면 선거가 끝난다'는 설이 나돌고, 각종 향응제공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선결과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신한국당 지도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문제의 진실을 빠른시간내에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현행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비단 신한국당의 당내 문제로만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에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위법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